

[기획]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고령 농업인 맞춤형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안전망 구축

✎ 김도윤 기자 | ⌚ 승인 2026.10.13 10:28

농지는 지키고 매월 연금은 받고..."은퇴 농업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인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에게 농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삶의 터전이자, 평생 흘린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영농활동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고, 농업소득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평생 일군 농지를 처분하면 당장의 생활자금은 마련할 수 있지만, 농지를 기반으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고민도 뒤따른다.

이러한 고령 농업인의 현실적인 고민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상)는 농지연금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사는 농지를 당장 매각하지 않고도 농지의 가치를 활용해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노후생활비를...광주지사가 이끄는 실효성 있는 선택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인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연금 지급 방식도 생존하는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 동안 받는 기간형 가운데 본인의 생활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광주지사는 제도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개별 상황에 맞춘 밀착 상담을 펼치고 있다. 가입자가 농지를 보유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고, 필요에 따라 농사를 계속 짓거나 임대를 통해 영농소득 또는 임대소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노후...배우자 승계 및 추가소득 창출 지원

이처럼 농지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노후뿐만 아니라 부부의 생활 안정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광주지사는 이러한 혜택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세심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의 노후소득에 그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 연금 외에 영농소득 또는 임대소득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업인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를 요구하기보다는, 영농 여건에 맞춰 소득 구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정부 재정의 안정성과 촘촘한 노후 안전장치 확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농지연금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안정성을 갖춘다는 점이다. 광주지사는 이러한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지사는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액이 연금채무보다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처분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여기에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과 함께,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을 통해 월 250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현장에서 적극 알리고 있다.

광주지사, 현장 중심 상담으로 농업인 눈높이 맞춤 지원 강화

이처럼 농지연금은 배우자 승계를 통한 부부 종신지급, 연금 수령과 함께 가능한 영농 및 임대소득,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성, 연금채무 부족액에 대한 추가 청구 부담 완화, 재산세 감면,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등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생 일군 농지를 당장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매월 생활비를 마련하고, 농지를 직접 활용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 또는 농지은행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 지역은 농촌과 도시가 맞닿아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농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곳이다. 이에 광주지사는 농지를 지키는 것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입 연령과 농지 가치, 배우자 유무, 영농 형태 등을 꼼꼼히 살피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종사하며 농지를 일궈온 농업인이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지역 농업인들이 각자의 영농 여건과 노후계획에 맞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담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